



윤석열의
노동시간
개악안
16면

한일 강제동원 합의
비판 2~3면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역사적 맥락 3면

확대되는
자산·소득
불평등
10면

제주 제2공항 추진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 되려는 것
6면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파업
12면

유아인 수사
마약과의 전쟁
정당화 위한 속죄양
13면



미국이 후원하는

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 반대한다

관련 기사 2~3면



윤석열의 한일 강제동원 합의

미국 주도 대중국 전선 구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 표명

김승주

일본 강제동원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무효화하는 한일 합의가 발표된 다음 날(7일), 윤석열은 이번 합의가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은 무엇일까?

윤석열은 한일 양국의 경제적 긴밀성을 언급했다.

한국 자본주의는 실제로 (미국과) 일본 경제와 구조적 상호의존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 왔다. 그런데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놓고 벌어진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일본은 한국 기업들에 수출 규제를 가했다. 이것은 강제동원 합의의 결과로 조만간 해제될 듯하다.

그러나 윤석열이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실은 더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동맹, 즉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전선을 강화하는 데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2010년대 초 이래로 미·중 갈등이 고조돼 왔다. 대만해협 문제, 반도체 경쟁 등 지정학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 모두 그랬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3월 7일 윤석열 정부 규탄 긴급 시국선언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

미·중 갈등을 더 자극했다.

중국과의 갈등에 대응해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포위하기 위해 일본과 호주를 중심으로 한국, 인도, 동남아 국가들을 결속시키려 해 왔다.(인도와 대다수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의 구상을 적극 지지하기보다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윤석열이 이번 한일 합의를 발표하면서 거듭 언급했던 “보편적 가치 연대”는 미국이 중국 ‘권위주의’에 맞서는 자국 중심의 ‘민주주의’ 동맹을 가리켜 사용해 온 표현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중에서도 특히

일본이 중요하다.

일본은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에서 중추 구실을 하는 동맹국인 동시에, 일본 자체도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는 세계 경제 3위의 제국주의 국가이다.

최근 일본은 엄청난 군비 증강,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 선언 등 재무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일본이 과거의 침략 역사를 집요하게 미화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 속에 있다. 특히, 일본(과 미국)은 일본의 침략적 과거사가 중국이 아시아 주변국

을 포섭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이런 고려 때문에 미국은 과거사 문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을 때 처음에는 중재하는 듯하다가도 결국은 한국이 양보하게끔 압박을 가했다.

이번 강제동원 합의에도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한국 정부의 합의안 수용을 “미국의 외교적 성과”로 규정하면서, 지난 1년간 한미일 외교관들이 40차례 이상 만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일 관계의 강화 움직임을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전례 없는 속도의 전략적 재편성”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 언론 <CNN>도 이렇게 지적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이 태평양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가 더 쉬워졌다.”

<블룸버그> 뉴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한미일이 중국에 맞서 더욱 단합된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합의 발표 직후 바이든이 이례적으로 한밤중에 입장을 내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일 양국이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을 열었다”며 극찬한 이유다.

굴욕 외교라기보다는 서방 제국주의 편에 서기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합의를 두고 민주당은 “굴욕 외교”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부분의 좌파들도 그런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단지 미·일의 압력에 굴종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은 지난 1년 동안 나토 정상회의, 유엔 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등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추진하자고 요청했을 만큼 한일 관계 개선에 능동적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지지하고 한미일 동맹 강화에 적극 임하는 이유는 그것이 한국 지배계급에 이익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삶과 이익은 완전히 내동댕이쳐졌다.

한국 지배계급은 미국의 중요한 동

맹이 됨으로써 그 자신의 국제적 위상을 올리고자 한다. 특히, 안전 보장은 한국 지배계급이 미국과의 동맹을 바라는 전통적인 중요한 이유의 하나다.

미국은 이 점을 간파하고는 중국 견제가 한국의 안보 이익과 합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한국 지배계급은 미중 갈등 사이에서 선택이 쉽지만은 않은 처지에 놓여 왔다. 최대 교역국으로서 중국의 중요성이 증대해 온 현실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도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지난해 말 한미일 동맹 강화 방향을 담아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도 노골적인 중국 배제 표현은 담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미·중 갈등이 더 첨예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조금씩 확산되면서, 한국이 두 제국주의 국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여지가 좁아지고 있다.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도 윤석열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법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제국주의에 능동적으로 협조해 한국 자본주의의 살 길을 찾는 방향으로 더 기울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한미동맹 일변도가 아니라 ‘균형 외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동시에, ‘국익’(실은 한국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한미동맹 자체는 발전·강화돼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이런 균형 잡기 식 입장은 미중 사이

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현실에서 갈수록 모순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민주당 정부들은 군사·지정학적으로는 한미일 동맹을 중시했다.

그 결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결정, 사드 배치 강행 등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하에서 벌어졌다.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계속 외면당했다.

특히, 반일 정서를 데마고기처럼 활용했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임기 말에는(2021년) 박근혜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 “양국 간 공식 합의”이므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문재인이 직접 “옳지 않고 곤혹스럽다”며 반대해 법원의 배상

▶ 3면으로 이어짐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대해 말해야 할 점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내세우며 이번 한일 합의를 변호한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두 국가가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로 나아간 모범’을 보인 합의라는 것이다. 또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일본 측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역사 인식을 기시다 정부가 계승했음을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시다 정부가 계승 의사를 밝혔다는 것 자체가 이 선언이 별볼일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기시다 정부는 계승 의사를 밝힌 바로 다음날,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역대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등 식민지 피해 문제가 1965년 한일협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인식을 바꾼 적이 없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도의적” 사과만을 했을 뿐이다. 위안부, 강제동원 등 일본 국가가 벌인 범죄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현안 쟁점이었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도 포함되지 않았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 신용하 서울대 교수는 “일본 측의 무성의로 과거사 문제에 전혀 진전이 없다”고 평가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자체가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한-일 간 동반자 관계를 굳히자는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 외무상이던 고부라 마사히코는 이렇게 말했다.

“파트너십 선언 당일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총리에게] ‘앞으로 한국 정부는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김대중 정부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 말은 일본 제국 범죄의 피해자들이 이전에 그랬듯이, 자국 정부를



1998년 김대중과 오부치

통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험난한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런 관계 개선의 대가로 한국은 30억 달러를 일본수출입은행에서 2.3퍼센트의 저리로 빌려올 수 있었다. 당시 한국은 ‘IMF 공황’ 이후 자금이 부족하던 때였다.

또한 당시에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며 군사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한일안보정책협의회(1998), 한일 공동해난구조 훈련(1999) 등이 이때 시작됐다.

이렇듯 당시에도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 흐름 속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자국 정부에 의해 냉혹하게 외면당한 것이다.

피해자 내치기의 원조

이것은 민주당이 과거사 해결 문제에서 일관되지 못하고 크게 미흡했음을 보여 준다. 민주당도 한국 지배계급의 역사적 이해관계를 이력저력 대변하려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이 이해관계를 더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구체제 세력과 그 후신인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다.

그들은 ‘윤석열이 친일이면 김대중도 친일이냐’며 민주당의 약점을 교활하게 이용하지만, 그들 자신이 이런 자

국민 배신의 원조라는 사실은 감춘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이 많은 문제를 잉태한 1965년 한일협정의 지지자이자 후계자들이고, 그것을 주도한 박정희와 김종필을 최근에 계승한 자들이다. 그 협정에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배상 책임 문제를 더 묻지 않기로 하고, 기업을 위한 경제 발전 자금을 받았다.

일본 국가가 지금껏 뻔뻔하게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떠들어댈 수 있게 합의해 준 장본인이 바로 현 여권의 대선배들이자 선친들인 당시 독재자들이다. 1960년대 한일 협정 추진 과정에서 당시 한국 측 대표 김종필이 독도를 폭파하자고 일본 측에 제의했던 일은 잘 알려져 있다.

그때 이래 한국의 지배계급은 미일 동맹에 스스로 부착돼,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성장(자본축적)해 왔다. 그 전략의 일부로서 일본과도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 군사 협력에서는 비록 ‘가다 서다를 반복’했지만 말이다.

독재자들의 이런 역사적 합의 때문에 위안부 문제 공개 제기는 절차적 민주화 전환이 시작된 1991년에야 가능했다. 국민의힘의 전신들은 시능상의 도움조차 준 적이 없고, 심지어 2015년에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합의를 일본 아베 정부와 했다.

한국 우파에게 과거사 문제는 늘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취급받았다. 지금 그들의 새로운 대표자 윤석열이 또다시 걸림돌을 치운다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중 갈등 고조 속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틀을 확고히 하는 것이 세 나라 지배자들에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좌파들은 민족적 굴욕에 대해 말하지 않고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 말하기를 애써야 한다.

이현주

이렇게 생각한다

서방 제국주의 지원 위한 한일 정상회담 반대한다

윤석열이 3월 16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기시다는 정상회담을 환영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 정부가 옛 조선반도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관해 조치를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양국 국가 수반으로서는 2011년 이후 12년 만에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중단됐던 서를 외교(양국 정상은 매년 상대국을 방문하는 외교)도 재개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강제동원 문제에서 파생된 양국 간 경제 갈등 사안이었던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해제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그와 함께, 안보 협력 문제도 논의될 것이다. 북한 핵 문제 대응과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법적 지위 정상화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일 협력 강화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일부다. (관련 기사 2면)

덕분에 윤석열은 4월에는 12년 만에 국민 자격으로 방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5월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이 이번 강제동원 한일 합의를 얼마나 환영하는지를 보여 준다. (물론 이미 성명으로 분명히 표명했다.)

무참하게 내쳐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안중에도 없이 서방(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더 커다란 군사적 긴장에 빠뜨릴 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을 반대한다.



2022년 윤석열과 기시다

▶ 2면에서 이어짐

강제집행을 중단시켰다.

이번 강제동원 합의에서 윤석열·기시다 정부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3면 상단 기사를 보시오)을 내세운 것도 그 선언의 주된 내용이 북한에 맞서 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선언에 언급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는 이후 완전히 공문구가 됐다.

역대 민주당 정부들의 이러한 실천은 이번 강제동원 합의가 단지 윤석열 정부의 친일·굴욕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선택한, 서방 제국주의 지원의 문제임을 보여 준다.

정부의 ‘굴욕적’ 자세를 강조하는 좌파적 민족주의 관점은 민주당 개혁파 같은 일부 자본주의 정치인들에 대한 환상과 착각을 일으킬 위험을 제기한다.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의 대중·대북 위계임이다

김영익

3월 13일부터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 앞서, 이미 크고 작은 연합훈련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었다.

미군의 전략 자산(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표, 특히 군사기지와 군수품 생산업체 등을 타격하는 무기체계를 가리키는 용어)도 빈번하게 한반도로 왔다.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은 무려 11일 동안 진행될 뿐 아니라 그 규모와 강도도 전보다 커질 듯하다. 여기에는 이른바 ‘북한 안정화 작전’, 즉 북한 점령 훈련도 포함돼 있고 대규모 상륙 훈련인 쌍용 훈련도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는 미군 항공모함도 동원될 예정인데, 이 항공모함은 한미연합훈련 외에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에도 동참할 것이다.

자체 핵무력과 중국이라는 배경에 힘입어 최근에 북한도 미국의 대북 압박 강화에 맞서 전에 비해 공세적으로 느껴질 만한 대항을 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들어 북한은 한미나 한미일 연합 훈련에 미사일 발사 등으로 바로 맞대응한다.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북한이 이런 행동을 벌이는 것은 전에 드문 일이었다.

미국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면서 올 봄에 북한은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설 수 있다. 전술핵 전력을 위한 새로운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도 최근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을 강화해 오고 있었다. 두 정부는 연합훈련을 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말한다. 특히, 점증하는 북핵 위협을 “억제”하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다지고 군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반도 불안정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

려면 이런 훈련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러나 일명 “참수 작전,” 즉 유사시 북한 지휘부 제거 훈련을 하면서 “방어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얼마 전 한미 “참수 작전” 훈련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수장 제거에 쓰였던 무인기 MQ-9까지 동원됐다.

전략 무기가 동원되고 참수 작전과 점령 훈련까지 진행되는 것이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이다.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 발사 한 데 이어 태평양을 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까닭이다.

점령 훈련

이런 연합훈련은 겉보기로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는 듯하지만, 미

국 정부의 진정한 목적은 그 이상이다. 즉,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향한 무력시위로 활용하고 있다.

얼마 전 한미 ‘핵우산’ 훈련을 한 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다. “[이런 훈련이] 북한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메시지를 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다른 국가가 중국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3월 6일 한국에 전개된 미군 전략폭격기 B-52H도 중국이 코앞인 서해에서 훈련을 벌였다.

오늘날 한반도의 불안정 증대는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제국주의적 갈등이 그 맥락이다.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중요한 한 켠점이다.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은 북한이 핵실험 등을 하면 “방어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듯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확보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면 역내 미군 주둔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시진핑은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부터 해결돼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중국이 보기에, 북한 대응을 명분으로 한 한미일 군사 협력 증진은 자국에 전략적으로 매우 위협적인 골칫거리다.

윤석열의 친서방(미국과 일본) 외교

중국의 정찰 풍선 소동에서 드러나듯이, 미·중 양측의 불신과 적대는 증대하고 있고 양국 관계가 더한층 악화되고 있다.

이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다지고 군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반도 불안정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강제동원 합의를 하면서 한미일 군사 협력 논의는 속도를 더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

는 미국·일본·호주·인도가 포함된 쿼드의 실무그룹에 적극 참여할 의향을 밝혔다.

윤석열의 한미일 협력 강화는 한반도의 핵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3월 8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이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회 창설을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확장억제”는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재래식 전력, 미사일방어체계 등 모든 전력을 동원해 동맹국을 방어한다는 개

념이다.

이런 협의회 창설 시도를 통해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계속 묶어 두고 싶어 한다. 두 동맹국이 독자 핵무장을 꿈꾸지 않게 잡아두는 것이다.

또한 “대(對)북한, 대중국 결속을 위해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다지겠다는 의도”(요미우리)도 있다. 궁극으로 중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동맹 강화 노력이 중국뿐 아니라 북한 국가의 생존

에도 위협을 가한다는 것을 아는 북한은 미국이 계속 적대적으로 도발한다면 “선전포고로 간주”할 수 있다고 응수했다.

이 협의회가 생기면 미국은 장기적으로 필리핀과 호주도 거기에 참여시킬 수 있다.

9일 <중앙일보>는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3자 차원의 확장억제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협의회 구성에 협력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외교는 위험한 도박이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상황을 보건대 올해 한반도 긴장은 더욱 점증할 것이다. 당장 전면적 충돌이 일어날 공산이 크지는 않지만, 긴장이 이렇게 계속 쌓이면 우연적 요인이 겹치며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요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대외정책 전문가들이 남북 간 국지전 가능성을 부쩍 경고하는 까닭이다.

한반도 긴장 증대와 함께, 남북한 두 정부들 간에도 불신과 적대가 쌓이고 있다. 최근 두 정부 모두 공개 연설이나 공식 문서에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 태세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미국·일

본의 대북 제재 강화에 보조를 맞추며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래 개인 31명과 기관 35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윤석열은 무인기 사태를 맞아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 “확전 각오 태세로 대응”을 강조했다. 3월 3일 김승겸 합참의장도 일선 부대들에 북한의 “도발에 현장에서 과감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과거 서해 교전과 연평도 상호 포격 사태의 경험을 돌아보면, 항상 남한 정부가 “압도적으로 대응하려다” 사태가 악화돼 국지전이 벌어졌다(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의 지적).

서방(미·일) 제국주의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를 반대해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냉전 압력이 커지고 북한 핵무력의 존재감이 점차 커지면서, 국내에서는 독자 핵무장론이나 주한미군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생각도 확산돼 왔다.

그러나 자국 방어를 위한 무력 증강과 한미 군사 동맹 강화를 옹호한다면 평화를 향한 길은 외려 더 요원해질 뿐이다.

한국은 이미 세계 6위 수준의 육중함 군사력을 갖고 있다(글로벌파이어파워 2022). 그럼에도 한국이 핵무장 시도 등 군국주의를 강화한다면, 안 그래도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의 무시무시한 군비 경쟁 드라이브가 가일층되는 데 일조할 뿐이다.

한미동맹은 평화 유지를 위한 필요악이 아니라, 긴장과 위기를 키우는 핵심 요인이다. 냉전 당시 한미동맹하에서 한국은 미·소 대결의 최전선이 돼

야 했다. 오늘날에도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미·중 갈등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매개 요인이다.

제1차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 카를 리프크네히트는 “주적은 국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경 너머의 지배자들이 차악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었다. 전쟁을 염두에 두고 군국화를 추진하는 자국 정부에 맞서는 게 전쟁을 만들어 내는 시스템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런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완전히 유효하다.

지금 한국의 좌파는 반제국주의적 평화운동을 건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일본 제국주의와 이에 협조하는 ‘우리’ 정부에 주되게 반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군사 협력, 대북 압박 강화, 군비 증강 등에 우선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김문성



김민성

검찰의 다급한 수사 시늉 자체가 그동안의 수사가 방탄 수사였음을 보여 준다

김건희 특검 지지는 권력자들의 특권에 대한 항의

민주당이 3월 8일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과 코바나 콘텐츠 불법 협찬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이 골자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학력 위조, 논문 표절 의혹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 의혹들을 뺀 것은 정의당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최근 정의당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는 게 확인됐으며 기존의 입장(특검 대신 검찰 수사를 촉구)을 바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옳은 변화이다.

지난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유죄 판결 이후 김건희 특검에 대한 지지가 커졌다. 김건희 계좌가 사용된 48건의 거래가 유죄로 판명됐는데도(유죄 거래 총 101건), 김건희는 기소되지 않아 아예 유무죄 판단을 받지 않았다. 이 48건의 거래는 통정·가장 매매(주가 조작범들이 미리 짜고 서로 사고 파는 거래)였다. 여기에는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의 계좌도 이용됐다.

3월에는 김건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할 때, 코바나콘텐츠가 주최한 전시 행사에 수십억 원의 기업 후원이 몰렸다. 이 후원금이 윤석열에 대한 뇌물성이라는 의혹이다.

정부 수반인 윤석열에 반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김건희 관련 의혹은 그보다 덜 중요하지만, 변화 염원층 사람들이 특검을 바라는 것은 정당하다. 검찰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 수사를 고의로 지연·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 요구는 검찰에 대한 정당한 불신, 권력자들의 부패와 특권에 대한 항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특검은 검찰에게서 김건희에 대한 해당 혐의 수사권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부랴부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에서 김건희 연루 여부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면죄부 수사일 게 뻔하다. 검찰의 다급한 수사 시늉 자체가 그동안의 수사가 방탄 수사였음을 보여 줄 뿐이다.

김문성

제주 제2공항 추진

제주를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것

김문성

윤석열 정부가 제주도 제2공항 추진을 본격화했다. 제주 서귀포 성산읍에 제2공항을 건설한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을 3월 6일 환경부가 조건부로 승인했다.

국토부 장관 원희룡은 제주도지사 시절 내내 제2공항을 끈질기게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엔 달

랐다. 제주 제2공항은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었다.

제주도의 평화 단체들과 정의당·진보당·노동당 등의 좌파 단체들은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국토부와 제주 상공회의소 등은 기존의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 등을 고려하면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2공항 건설은 환경 파괴,

난개발의 부작용을 낳을 게 뻔하다. 제주 성산의 아름다운 풍경이 대형 토목공사로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제2공항은 단순히 관광업 진흥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3월 7일 제주 강정 구럼비 폭파 11주기 집회를 연 제주도 내 좌파·평화 단체들은 제2공항이 “강정의 비극”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정 해군 기지 건설 때도 정부와 군

은 ‘민관 합동 미항(美港)’ 운운했다. 그러나 지난 6년 동안 정부가 말한 크루즈선(민간 대형 관광선)은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대신 미국 해군의 최신 이지스구축함, 핵항공모함 등이 수차례 정박했다.

2018년에는 미국 항공모함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투함들이 참가한 대규모 관함식이 열렸다.

그러므로 가장 큰 위험은 “제주도의 군사화”에 있다.

제주도에 핵 배치?

지난해 12월 말 국민의힘 북핵위기 대응특별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특위 위원장은 육군교육사령부 사령관 출신 3선 의원인 한기호였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보고서에는 미국의 핵무기를 제주도로 전진 배치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제주도를 전략 도처화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2공항에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활주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요새화

파문이 일자, 국민의힘과 한기호는 최종 보고서가 아닌 “지라시”라고 발뺌했다.

하지만 기자들이 입수한 보고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서 구한 것이었다. 한기호 자신도 특위 활동을 마치는 기자 간담회에서 보고서 내용에 부합하는 발언을 했다. “[새로 만들] 공항이 충분한 활주로를 확보하면 좋겠다.”

제주 공군기지가 처음 거론된 것도 아니다. 애초 해군기지와 함께 공군기지도 함께 추진됐었다. 반발이 크자, 노무현 정부가 강정 해군기지를 먼저 추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장관 정경두는 공군참모총장 시절, 제주도에 공군부대를 배치하겠다고 공언했다.(부대 기지를 제2공항에 포함시키려는 것)

제주도지사 오영훈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국민의힘 북핵특위 세미나에서는 장차 제주에 공군부대, 미사일부대, 해군부대, 해병부대 등을 배치할 계획도 토론됐다고 한다.

제주도에 미군도 이용할 수 있는 공군기지를 만들려는 목적은 강정 해군기지의 목적과 똑같다. 제주도를 중국을 포위할 미국과 한국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한국 지배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 중심 국제질서 속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국제정치적 위상을 높여 왔다.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미국 제국주의 질서의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제주도는 동아시아 해상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태평양전쟁 말미에 일제도 제주도를 요새화해 미군과 싸우려고 했다. 이승만(중국 혁명 직전)과 박정희(1969년)는 제주도를 미국에(해·공군) 군사기지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었다.

특히 대만 해협에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현 국면에서 제주도는 미국에게 매우 유용한 요충지가 될 수 있다.

제주도는 “미군 기지의 섬”이라 불리는 오키나와보다 중국 본토에 더 가깝다. 중국 해군의 주력 함대인 북해함대(칭다오 기지), 동해함대(상하이 기지, 닝보 기지)와 600킬로미터 안팎 거리에 있다. 대만과도 그리 멀지 않다.

지난해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기습 방문한 직후 주한미군은 대만해협 상공에 전략정찰기 U2를 파견했다. 그 항로는 제주 상공을 지났다. 제주에 미군이 이용할 공군기지가 생기면, 대만 유사시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주한미군에서도 근무했던 미해군 작전장교 출신 데이비드 서치타의 2013년 보

고서(“제주해군기지: 동북아의 함의”)를 인용해 제주 군사기지화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제주해군기지를 이용하는 미국 함정과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은 남쪽으로 향하는 중국의 북양함대를 막을 수 있다. 또 중국의 동양함대의 측면을 공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데이비드 서치타의 보고서 중)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

즉, 대만 유사시 멀리 떨어진 미군 전력의 중국 해군보다 대만해협에 늦게 도착하는 사태를 방지하는 데에 제주기지가 결정적으로 유용하다는 것이다.

강제 동원 ‘해법’과 일맥상통

미군은 올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최신 이지스구축함을 제주 기지에, 핵 추진 잠수함을 부산 기지에 정박시켰다. 3월 13일에는 대규모 한미군사 연습을 실시한다. 한·미·일 군사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제시하지만, 이런 훈련들은 중국 포위 전략이자 대만 유사시를 대비한 군사 연습의 일환이다.

국민의힘 북핵특위 세미나에서 상륙 부대인 해병부대 배치 계획이 언급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이처럼 제주 제2공항 추진은 강정 해군기지와 함께 사실상 미군의 대

중국 전초기지 구실을 할 공군기지를 만들려는 계획이다.

윤석열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적극 협조하는 게 한국 자본주의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최근 일제 강제동원 문제 관련 한일 합의도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윤석열은 조만간 일본과 미국을 연달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노선은 동아시아와 한반도 전체를 더 커다란 군사적 긴장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를 멈추려면 윤석열 정부를 멈춰 세워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윤석열 정부는 3월 안에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9월까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고려하면,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악을 추진할 듯하다.

조만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그러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니 그 전에 재정을 늘려놔야 한다는 것이다.

빠듯한 살림에도 소득의 9퍼센트나 되는 연금 보험료를 내 온 노동자·서민 처지에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기금 고갈론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밝힌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890조 원이다(2022년 12월 말 현재). 지금부터 보험료를 한 푼도 건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현재 65세가 넘는 노인 인구 900만 명 전체에게 매달 100만 원씩 8년 2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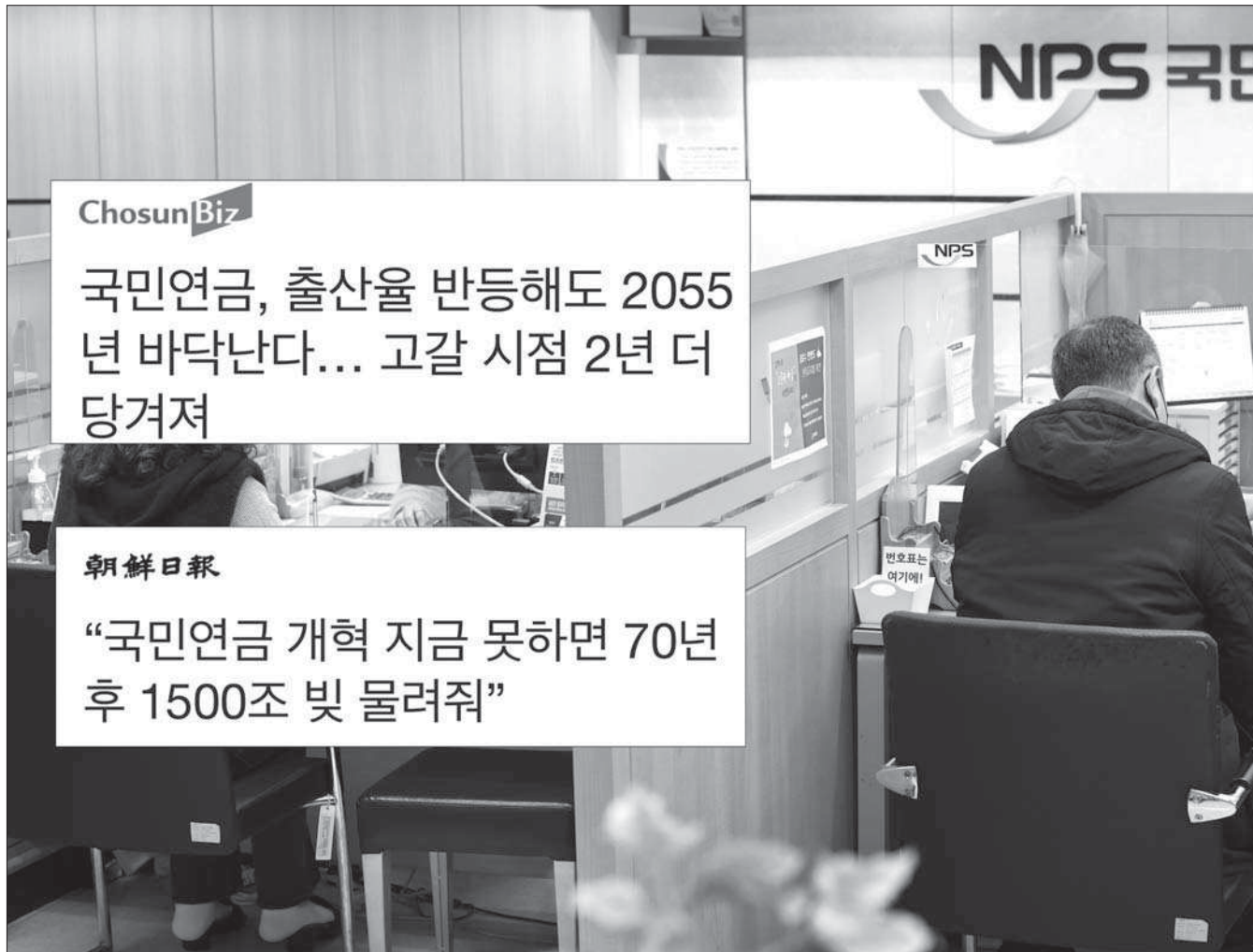
그러나 실제로는 2022년 6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433만 8000명만이 평균 39만 7000원을 받고 있을 뿐이다.

바로 이 점, 한편에 기금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도 보험료 납부액에 비해 해 소액의 연금만 지급하는 현실이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첫째 요인이다.

정부는 보험료 납부액에 비해해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이 일종의 적금인 양 여기도록 만들어 왔다. 그러나 '기금 고갈'은 마치 은행이 부도나서 적금(노후 자금)을 날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의 애초 취지는 노후 자금을 각자 적립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노후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소득자에게는 더 후하게, 고소득자에게는 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의 재분배도 이뤄지도록 했다.

정부는 이렇게 마련한 기금으로 재정을 마련하고 주식·채권·부동산 등을 사들여 경제를 떠받치는 데 사용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노후는 각자 책임지라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32년 뒤의 기금 '고갈'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노인 빈곤이다

는 것이다.

정부의 기금 고갈론은 거액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협박하는 꼴이다. 다 날리기 싫으면 더 내놓으라는 것이니 말이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당장 한국의 기초연금 제도도 보험료를 따로 건지 않고 정부 재정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보험료 납부 이력과 관계 없이 노인들에게 어지간한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한편, 누진세를 강화하거나 기업주들에게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면 국민연금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

정부 책임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모두 OECD 1위를 지키고 있는 한국에서 이는 꼭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이렇게 운영하면 기금 고갈론을 이용한 보험료 인상 협박이 잘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수익자 부담 원리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역대 한국 정부가 노인 빈곤 문제를 외면하고 연금을 적금처럼 운영해 온 이유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불안감을 자극하

는 둘째 방식은 기금 고갈이 마치 당면하고 확정된 일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앞서 1월에 발표한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보더라도 "앞으로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적립금도 계속 늘어나 "2040년 최고 1755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2055년에서야 기금이 고갈된다는 게 정부 예측이다.

무려 32년 뒤의 일이다. 게다가 이런 전망이 과연 얼마나 정확할까?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규모를 예측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적용한다. 인구(출산율, 기대수명, 사망률, 국제 이주), 경제(실질경제성장률, 실질 임금상승률, 실질금리, 물가상승률, 경제활동참가율, 기금투자수익률), 제도(국민연금 가입률, 지역가입자 비중, 납부예외자 비율, 지역가입자 징수율,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이 요소들 중 어떤 것들은 비교적 장기 예측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3~4년 앞도 내다보기 어렵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한 분기 앞도 제대

로 예측하지 못한다.

설령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반드시 노인들의 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미래 노동자들의 부담을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예측대로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그 해 전체 연금 지출은 GDP 대비 7퍼센트가량에 불과하다. 이미 유럽 나라들은 연금 지출에 GDP의 10퍼센트가량을 쓰고 있다. 이 유럽 국가들의 노인 인구 비중이 20퍼센트를 넘지 않고, 2055년 한국의 노인 인구 비중이 50퍼센트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한국의 연금 지출 규모는 매우 적은 것이다.

진정한 문제는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이냐 하는 데 있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이 이를 부담하게 하려고 지금부터 기금 고갈론을 내세워 보험료 인상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생계와 노후 생활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론은 보험료 인상을 협박하는 눈속임이다.

(다음 호에서는 국민연금 개악의 경험과 좌파들의 대응을 살펴보겠다.)

장호중

반도체를 자국 패권의 무기로 삼는 미국, 난관에 처한 한국 자본가들

정선영

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자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10퍼센트 가량을 보조해 주는 대신 영업 기밀을 공개하고, 초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에 반도체 관련 투자를 확대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한국 기업들의 경우 중국에 이미 상당 규모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해 놓은 상황이어서 추가 투자를 못 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과의 군사적·경제적 협력을 구축하려고 노력해 왔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바이든은 중국이 첨단 기술을 육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한편, 한국·대만·일본 등과 협력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강하게 추진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정부의 이런 방향에 적극 호응하며 한미 반도체 동맹을 추구해 왔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까지 포괄하는 군사 협력을 강화해 왔을 뿐 아니라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추진한 경제적 기구들(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칩4 동맹' 등)에도 참가했다.

미중 갈등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미국 편을 들며 긴장 고조에 일조해 온 것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 지배자들에게도 중국은 가볍게 제칠 수 있는 시장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높여 중국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 시장도 놓치지 않겠다는 바람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미중 갈등이 훨씬 더 첨예해지고 대만을 둘러싼 열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게다가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의 기업들 간 경쟁도 치열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에 협조해 왔지만,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 때문에 뒤통수를 맞은 처지가 됐다

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본지는 일찌감치 한미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계획 앞에 커다란 난관이 놓여 있다고 지적해 왔다.(본지 426호 '한미 반도체 동맹, 순탄할까?', 374호 '바이든 이후 더 심화되는 미·중 경제갈등, 한국은 어디로?'를 보시오.)

이번에 미국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지원법을 둘러싼 논란도 그 일부다. 세부 내용이 공개되자, 한국에서도 정부와 여야 가릴 것 없이 미국에 지원 기준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4월 2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은 동맹국의 손실 감소를 요구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에서 관련 논의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윤석열 정부는 이제까지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동참해 오면서 곤란한 상황을 자초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심화되는 미중 갈등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둘러싸고 지배자들과 정치권 내에서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것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추구해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이미 지난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해 8퍼센트에 이르는 세액 공제를 해 주기로 했고,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대기업에는 15퍼센트, 중소기업에는 25퍼센트에 달하는 세액 공제를 해 주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해 냈다.

이 법안대로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년간 추가로 얻는 법인세 감면 혜택은 무려 9조 원이 넘을 것이다.

민주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감세 혜택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자국 중심적 반도체 보조금 정책에 대한 공분이 일자 반도체 기업들에게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은 곧 발표할 한국판 인플레이션방지법(IRA)에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정부 안보다 더 많은 수준인 30퍼센트 이상으로 제안하려 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반도체 세금 감면 추진을 비판했다. 맞는 말이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줄 게 아니라 더 거둬서, 생계비 위기로 고통받는 노동자 등 평범한 사람들의 복지 혜택을 늘리는 데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장혜영 의원이 세금 감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이 우위에 서기 위해 국가적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들은 결국 노동자들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위험이 크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자가 희생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2019년에 한일 경제 갈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시간 개악, 안전 규제 완화 등이 진행됐던 바 있다.

게다가 노동자를 공격해야 한다는 이해관계에서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나 차이가 없다.

국가 간 경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맞서며 투쟁을 전진시켜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바람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중립 외교’ 추구가 낡을 모순

좌파 일각에서는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립적인 외교 통상 정책과 핵심 산업의 국내 생산으로 경제주권을 세워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는다.(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장, <민플러스>)

물론 상당수 진보층 사람들은 친미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미중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정책이 낫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중립 외교란 결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 끊임없는 줄타기를 해야 하는 일이다. 미중의 갈등이 심화할수록 이런 줄타기는 실현하기 힘든 곡예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실질적 중재자가 되려면 결국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되기 쉽다. 그런 논리가 강화되면 경제력과 군사력을 길러야 한다는 압력 속에서 노동자들에게 희생이 강요될 수 있다.

핵심 산업의 국내 생산을 추구하는 것도 생산이 이미 세계화된 상황에서 공상적이다. 관련 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기업들의 이윤 창출과 보호를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될 수도 있다.

진정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미중 간의 중립외교를 추구할 게 아니라 반제국주의적인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기업주·지배계급 일부와 한편이 되는 방향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각국에서 자국의 지배계급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과의 국제적 단결과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



반도체 기업들의 과잉 투자와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은 반도체 과잉생산을 심화시키며 한국의 무역적자를 키우고 있다

경기 침체와 미중 갈등으로 심화된 반도체 과잉생산

한국의 무역적자가 1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무역적자는 472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1~2월 무역적자만 180억 달러로 벌써 지난해의 38퍼센트에 달한다.

이처럼 장기간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6~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상품 무역에 해외 투자 수익 등을 합쳐서 집계하는 경상수지는 지난해에 흑자를 기록했지만, 흑자 폭은 제작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입액이 증가한 것이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이었다. 그런데 하반기로 갈수록 에너지 가격 상승뿐 아니라 수출 감소가 큰 몫을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전체 수출의 20퍼센트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퍼센트 감소했다. 이어 올해 1월 44.5퍼센트, 2월

42.5퍼센트 감소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다. 그런데 세계적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급락했다. 올해 1, 2월 D램 가격은 전년 대비 47퍼센트나 떨어졌다.

반도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한 부문이었다. 재택근무 등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며 IT 기기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시설 투자와 함께 생산을 크게 늘렸다.

그런데 물가가 상승하고 세계적 경제 침체로 IT 기기 수요가 감소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세계 PC 출하량은 전년 대비 28퍼센트 줄었다. 스마트폰 출하량도 2013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여기에 중국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수출이 급락했다.

물론 자동차 부문처럼 반도체 공급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부문도 있다. 그러나 PC나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는 쌓이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적인 투자가 문

제를 낳은 것이다. 내년에 미국에서 삼성뿐 아니라 인텔, TSMC의 새 반도체 공장들도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룬다는 자유 시장 경제의 신화가 틀렸음을 보여 준다. 민주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 어떤 때는 공급 부족이 벌어지고 또 어떤 때는 과잉생산이 벌어지면서 극도의 비효율과 위기가 발생한다.

게다가 미중 갈등은 반도체 공급 과잉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반도체를 자국 패권의 무기로 삼는 미국, 난관에 처한 윤석열’을 보시오.)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각국 정부도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반도체 시장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은 미중 갈등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 내부에서의 경쟁과 갈등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반도체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앞날은 더 험난해질 수밖에 없다.

계속 확대되는 자산·소득 불평등

얼마 전 통계청은 자산 격차가 최고로 벌어졌다고 발표했다.

2022년 3월 말 기준 자산 상위 20퍼센트 가구의 자산은 평균 16억 5457만 원으로, 하위 20퍼센트 2584만 원의 64배나 났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최대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부의 불평등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한다. 자산 상위 20퍼센트에는 어지간한 노동자들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불평등의 확대는 상위 1퍼센트 이내의 진정한 부자와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2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2021년에 금융자산만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는 42만 4000명이었다. 전체 인구의 0.82퍼센트에 불과한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2883조 원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 총 금융자산(4924조 원)의 58.5퍼센트나 됐다.

이 중 금융자산이 300억 원 이상인 '초고자산가'는 8600명(전체 인구의 0.02퍼센트)으로, 이들의 총 금융자산 1348조 원은 가계 전체의 27.4퍼센트나 됐다.

상위 1퍼센트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부유층의 재산은 점점 커졌다.

2020~2021년에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 부자는 7만 명 늘었고, 금융자산 300억 원 이상인 초고자산가도 2200명이나 늘어났다. 부유층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2년 새 730조 원 가까이 늘었다.

특히 초고자산가의 금융자산이 급증했는데, 이들의 평균 금융자산은 2019년에 1398억 원에서 2021년 1568억 5000만 원으로 170억 원 넘게 늘었다.

금융자산만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서도 큰 혜택을 받았다.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자산은 2019년 1735조 원에서 2021년 2361조 원으로, 630조 원 가까이 올랐다.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층이 코로나 팬데믹과 집값 급등으로 고통받는 사이, 부유층은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것이다.

불평등의 확대는 자산뿐 아니라 소득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서도 최



부유층의 부를 늘려 주는 데에만 열심인 윤석열 정부

상위층의 소득은 크게 는 반면, 나머지 사람들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0년에 상위 0.1퍼센트의 급여소득은 8억 3339만 원으로, 중위소득자 2895만 원의 28.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퍼센트의 '근로소득'이 2019년~2020년에 7억 6763만 원에서 6576만 원(8.6퍼센트)이나 오르는 동안, 중위소득은 고작 71만 원(같은 기간 2824만 원에서 2895만 원으로) 오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주류 언론은 소득 상위 10퍼센트와 나머지를 비교하며, 고소득 노동자에게 불평등 확대의 책임을 떠넘기기도 한다.

그러나 상위 10퍼센트의 평균 급여가 1년 새 340만 원 올랐지만, 이 중 상당 부분은 상위 1퍼센트, 0.1퍼센트의 급여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상위 1퍼센트 급여 집단은 상층 관리자, 경영·금융 전문가 등으로 이뤄져 있는데, 2000년 이후 상층 관리자들과의 급여가 급증했다.

게다가 2022년에는 금리가 급등하고 물가도 대폭 오르면서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층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2년 3분기 상용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5퍼센트 감소했다.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 폭이 각각 5.1퍼센트, 5.6퍼센트로 더

컸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5.9퍼센트나 올랐기 때문이다.

2022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도 15.1퍼센트를 기록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 소득 50퍼센트 미만을 벌어들이는 가구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전체 인구의 15.1퍼센트가 연간 1587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했다는 뜻이다. 특히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퍼센트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커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와 노동계약으로 부유층의 부를 더욱 늘려 주려고 한다. 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늘려 줘야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 혜택이 저소득층에게도 돌아간다는 '낙수 효과'론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미 지난 수십 년간 실패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도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우며 집권했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등 노동자 쥐어짜기에 나서며 불평등 심화에 일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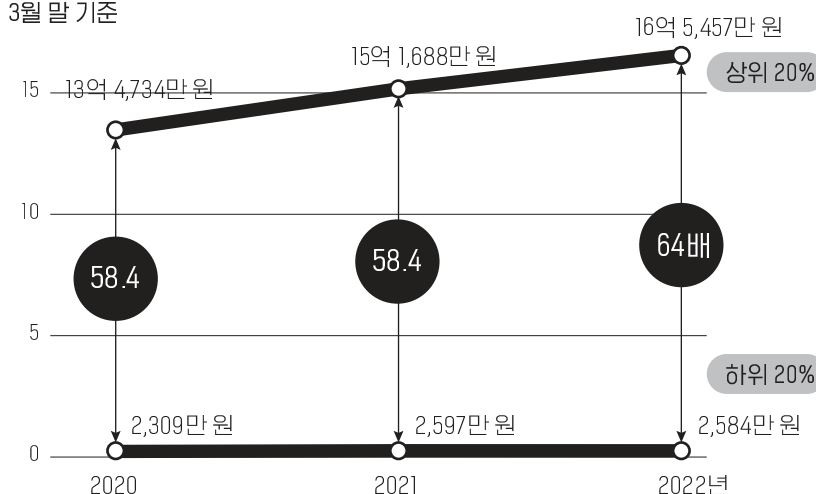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임금 인상,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제대로 된 복지 확대 등을 해야 한다.

노동자와 서민층의 삶을 위한 투쟁과 그에 대한 연대가 강화돼야 한다.

강동훈

자산 상위 20% 가구 격차

3월 말 기준



징집 피해 한국 온 러시아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라

임준형

난민 인정 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소송에서 이긴 러시아인 난민들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했다. 법무부는 이들을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며 또다시 불안한 시간을 견뎌야 하는 처지로 내몰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징집을 거부한 러시아인 난민들이 인천공항에 와 난민 신청을 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지 않기로 결정하고 입국을 막았다. 이 때문에 러시아인 난민 5명이 수개월째 인천공항에 억류됐다.

러시아인 난민들은 난민 지원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법무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5명 중 3명에 대한 판결이 나왔고 2명이 승소했다.

안타깝게도 1명은 패소했다. 그는 결국 3월 4일에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그런데 2월 28일에 법무부는 승소한 2명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입국은 허가하되 주거를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영종도 센터')로 제한했다.

물론 인천공항에 억류돼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영종도 센터는 외진 곳에 있는데다 허가를 받아야 외출·외박이 가능하다. 외부인의 방문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법무부는 재판 기간 중 난민 신청을 하지 말라는 조건도 달았다. 일단 난



인천공항에 억류돼 있는 러시아인 난민이 화장실에서 힘들게 빨래와 샤워를 하고 있다

민 신청을 하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적용돼 쫓아내기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단순 징집 거부가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협소하고 까다로운 난민 인정 기준 자체가 문제다. 이런 식이면 불의한 전쟁에서 헛되이 목숨을 잃지 않으려는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은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백 보 양보해서,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법무부와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릴 만큼 쟁점이 라면, 정식 난민 심사를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전쟁없는세상은 법무부에 러시아인 난민의 입국 허가

난민 심사 기회 부여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여 왔다. 법무부의 항소 방침이 알려지자 난민인권네트워크는 3월 1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신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을 합쳐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유엔난민기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해외로 떠난 우크라이나인 난민이 1550만 명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징집을 피해 나라를 떠난 러시아인도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된다.

그러나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과 러시아 모두 수많은 인명 피해도 아랑곳 않고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확대하려 한다.

윤석열 정부도 여기에 일조하고 있다. 윤석열은 폴란드 등 제3국을 통해 무기를 우회 지원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을 편들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삶의 터전이 파괴돼서든,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든, 징집이나 정치적 억압을 피해서든 난민이 늘어날 것이다. 한국으로 오는 난민도 늘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서방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협력해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서도, 그 희생자인 난민의 유입은 경제적·정치적 부담으로 여기며 억누르려 한다. 법무부가 “향후 징집을 피해 난민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힌 것이 이를 잘 보여 준다. 한국행을 고려하는 난민들에게 한국으로 오지 말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이 소송의 진정한 목적인 것이다.

요컨대 윤석열 정부는 러시아인 난민이든, 수출한 무기와 그로 인해 확대될 전쟁 때문에 희생될 사병과 민간인이든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방 제국주의 강대국의 지배자들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러시아의 평범한 대중과 연대해야 한다. 그 연장선에서 러시아인 난민도 환영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인 난민들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고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따뜻한 물조차 쓸 수 없는 공항 억류 난민

본지는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라서 인천공항에 억류돼 있는 한 러시아인 난민과 연락이 닿았다.

그는 3개월 전에는 비행기 티켓을 구입해 한국에 살고 있는 부인이 인천공항 출국장으로 와서 입을 옷과 생필품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한국에서 21년간 거주하고 있는 그의 부인은 한국 국적도 취득했다.

그러나 현재는 돈이 떨어져 부인을 만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항 내 생활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한 달 전부터는 따뜻한 물도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현재 머무는 지하층 출국 대기실과 3층 장애인 화장실을 오가며 빨래와 세면을 해결하고 있다. 샤워시설이 없기 때문에 씻는다고 해도 페트병에 물을 담아 몸에 뿌리고 손으로 적시는 게 전부다.

그는 콧물·두통 등 감기 증상에도 시달리고 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듭니다. 출입국 당국과 법무부가 우리를 이렇게 다루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1심에서 승소한 2명에게 항소한 것은 1심이 진행 중인 2명에게도 압박이 될 것이다. 1심에서 이겨도 법무부가 항소할 게 뻔하니, (영종도 센터로 거처가 옮겨지기는 하지만) 계속 버틸지 고민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와 함께 1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난민은, “한국 정부가 우리를 도와 주지 않는데 또 6개월(법무부가 항소할 경우 예상되는 소송 기간)을 여기서 살 수 없다며 다른 나라로 떠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1심 판결은 3월 28일로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 줘야 한다. 또 법무부는 항소할 것이 아니라 징집 거부 러시아인들을 즉각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

350만 명이 파업과 시위에 참가하다

3월 7일 프랑스에서 일어난 대규모 파업과 시위는 큰 성공을 거뒀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에 따르면 350만 명이 행진에 참가했다. 중요한 물음은 그 다음은 무엇이라는 것이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연금 개악에 맞선 저항의 일환으로 지난 수십 년 이래 최대 규모의 시위가 올해 이미 벌어진 바 있다. 1월 31일에 일어난 그 시위에는 280만 명이 행진했다고 노동조합들은 밝혔다.

3월 7일 시위는 그때보다도 규모가 크고 더 단호했으며, 활력과 분노도 더 컸다. 파리에서는 약 70만 명이 행진했다. 마르세유에서는 24만 5000명이 시위를 벌였는데, 지난달 세운 기록보다 3만 명이 더 는 것이다. 툴루즈에서는 12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이 행진들이 안전한 산책이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도시 전체를 점령하고, 시가지를 가득 메우고, 조용한 시골 동네를 격렬한 저항의 중심지로 바꿔 놓았다. 프랑스 남서부의 소도시 타르브에서는 인구 4만 3000명 중 2만 1000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이러한 모든 운동의 중심에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불문한, 온갖 유형의 노동자들이 있다. 또, 대학생들과, 교문을 봉쇄해 전국에서 300개 이상의 학교를 휴교시킨 중·고등학교 학생들, 연금 수급자들, 실업자들도 있다.

파리 시위를 취재한 프랑스24 뉴스 기자는 이렇게 전했다. “모든 부문,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시위에 나왔다. 교육, 제약, 금속, 항공 부문 종사자들이 시위에 나왔다.”

이처럼 다수의 대중이 반대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소수만이 자신을 지지한다는 것을 이미 알지만, 개의치 않는다.

그 시위가 있던 날, 장관들은 가장 파장이 큰 조항이 상원에서 통과되도록 애쓰고 있었다. 바로 연금 전액 수령 연령을 2년 늦추는 조항이다. 그 자체로도 대대적인 공격이지만, 노동계급을 고분고분하게 길들이겠다는 지배계급의 결의를 상징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마크롱은 시위를 제압하고 개악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후, 분노가 사그라



모든 부문, 모든 세대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다. 3월 7일 파리 도시를 행진 중인 시위대

들기를 바란다. 어쩌면 노조 지도자들에게 후퇴할 명분을 주려고 꾀죄죄한 양보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크롱은 거리 시위만이 아니라 파업에도 직면해 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파업 말이다.

그날 거의 모든 철도 운행과 대부분의 파리 대중교통이 멈췄다. 노동조합들은 프랑스 교사의 60퍼센트가 파업했다고 밝혔다.

파업 노동자들은 프랑스에 있는 모든 정유소의 진입로를 봉쇄했다. 파리의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이 6일부터 파업

을 시작해, 파리 거리는 쓰레기가 이미 엄청나게 쌓이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항구 도시 르아브르의 공단을 봉쇄해 가동을 멈추게 했다.

8개 노동조합 연맹 모두 파업을 지지했고 일부는 추가 행동이 필요하다는 말을 늘어놓고 있다. CGT는 “이것은 후속 행동의 시작일 뿐”이라고 트위터에 썼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은 무기한 대중 파업에 필요한 저항 조직을 기층에서 건설하지 않을 것이다.

7일 밤 발표된 공동 발표문은 다가오는 토요일에 또 행동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지만, 필연적으로 이는 주말이 아닌 평일에는 파업을 더 적게 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13일에 시작하는 주에도 하루 파업을 벌이겠다고 했지만, 정확한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의회 일정에 따라 파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날짜는 3월 15일이다.

잠재력을 흘깃 보여 주는 사례들이 있다. 예컨대 툴루즈에서는 철도 노동자 150명이 운동이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의 조합원 집회를 열고 3월 8일에도 파업을 지속하기로 만장일치로 표결했다. 한 정유 노동자는 “휘발유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는 생산 중단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몇몇 노조 지부의 사회주의자들과 기층 활동가들은 교사, 대중교통 노동자, 철도 노동자, 학생 등의 집

단을 끌어모았다. 노조 지도자들의 파업 선포 여부와 무관하게 더 광범한 파업을 이끌고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3월 8일에도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시위와 연계해 대규모 행동이 계속될 것이다.(아래를 보시오)

연금 개악에 맞선 투쟁은 다른 쟁점을 둘러싼 정치적 저항도 고무하고 있다. 3월 7일에 인종차별 반대 단체 ‘연대의 행진’은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면 우리는 이 정부와 정부의 논리 일체에 맞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악과 프랑스 내무장관 다르마냥의 반(反)이민법, 무단 점유 금지법[집이 없어서 빈집에 들어가 지내는 사람들을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에 모두 반대합니다. 마크롱과 마크롱의 세상에 반대합니다! 연대, 자유, 평등, 모두를 위한 완전한 권리를 위하여!”

기층 수준에서 서로 만난 노동자들은 연금뿐 아니라 임금과 불안정한 노동계약 철폐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때로는 노동이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생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거기서 누가 득을 보는지, 어떻게 생산해야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토론도 있다.

이 투쟁은 프랑스를 훨씬 넘어서는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기업주들과 노동자들의 조용한 합의로 쉽게 끝나지도 않을 것이다.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수사 마약과의 전쟁 정당화 위한 속죄양

프랑스 기업주·정치인들은 1980년 대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다. 그들은 영국의 마거릿 대처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이 기업주와 부유층을 위해서 이룬 일을 똑같이 성취하려고 공격을 퍼부었다.

거듭된 공격이 만만찮은 반격에 직면하자, 정부는 원하던 바에 한참 못 미치는 타협을 했다. 2010년 이후 지배자들은 경쟁 압력을 느끼면서 태세를 강경하게 다잡았다. 게다가 오늘날 세계적 위기가 벌어지고, 임금과 연금이 아니라 더 많은 미사일과 폭탄에 돈을 쓰자고 장성들이 아우성치는 상황인 만큼, 프랑스 지배자들의 태세는 훨씬 강경하다.

마크롱은 또다른 불만족스러운 타협을 한 인물로 기억되지 않으려 한다. 그는 정면 대결로 승부를 내려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파업을 지속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데, 여기에는 기층에서의 조직이 불가결하다.

기층에서 계속되는 크고 작은 파업

현지 시각으로 8일 이른 아침부터, 프랑스 곳곳의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파켓라인[대체인력 투입 저지선]을 치고, 교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며 파업을 이어 나갔다.

철도 등 대중교통, 정유, 폐기물 수거,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무기한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주도성이 발휘되고 있기도 하다. 루아르 지방의 금속 노동자들은 이틀에 한 번 두 시간 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금속가공 공장 오베르뉴발의 노동자들은 매일 2~3시간 파업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 남부 아리에주에 있는 프렉세어의 화학 노동자들은 매일 여러 시간 동안 파업을 벌이고 있다.

식당 델리플라넷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매일 조리를 30분 늦게 시작하는 식으로 투쟁하고 있다.

번역 박이량

경찰이 배우 유아인 씨를 상대로 마약류 투약 혐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언론은 그를 비난하는 기사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은 윤석열이 내건 국정과제의 하나다.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도 따라 외치고 있다.

마약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하기 전에”,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윤석열) “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다.”(한동훈) “마약사범의 뿌리를 뽑겠다.”(윤희근)

정부·여당의 고위층도 가장 강경한 표현들로 마약과의 전쟁을 주문한다.

“대대적으로” “일망타진” “최고 수위로” “강도 높게” “나라가 국민을 지키는 차원의 문제” “마약은 한 나라의 거의 모든 부문에 파괴적 영향을 준다” “지금 그 독이 터지기 직전”

그러나 윤석열의 ‘마약과의 전쟁’은 오히려 이태원 참사로 이어졌다. 마약에 대한 사람들의 염려는 이해할 수 있지만, 약당들이 좋은 일을 할 리가 없다.

진짜 의도

윤석열의 진짜 의도를 꿰뚫어 보려면 첫째, 마약 사용이 급증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과장이 심한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이 점은 본지 기사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 성공할 수 있을까?’에 잘 나온다.)

둘째, 과거 우파 정부들이 벌인 마약과의 전쟁을 돌아봐야 한다.

1961년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군사정부는 “국민 체력을 꺾멸하고 사회를 교란시키는” 마약을 ‘국가혁명방해죄’로 다스렸다.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마약을 “3대 사회악”으로 규정했다. 1979년 쿠데타 직후 전두환도 마약을 “사회악”, “사회적 독소”, ‘반민주’, ‘반사회’, ‘반국가’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전두환의 후계자 노태우 정부는 1989년 마약사범에게 최초로 사형을 선고했고 1990년 “마약과의 전쟁”이란 명칭을 처음 사용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박정희와 전두환처럼 저항하는 민중과 전쟁을 벌였다.

(우파 정부보다 덜 노골적이었지만) IMF 경제공황 와중에 집권한 김대중 정부도 마약사범 일제 소탕 기간과 국가보안법 사건 구속수사 기간이 흔히 겹칠 정도로 마약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과거 ‘마약과의 전쟁’들은 모두 대중



마약은 공중 보건 문제이지 형사 사법 문제가 아니다

을 통제하기 위한 기만술이었다.

공공요금/금리 인상, 복지 축소와 부자 감세, 노동 개악,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등 노동자·서민에게 경제와 지정학적 위기의 고통을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는 그에 따른 사회 불안정과 아래로부터 저항이 걱정될 것이다. 마약과의 전쟁은 이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억압의 술책이다.

셋째, 세계적으로 마약류에 관한 정부들의 대응은 계급적이고 정치적이다. 멕시코의 PRI·PAN·PRD 정부, 중국 공산당 정부, 미국의 공화당·민주당 정부, 영국의 보수당·노동당 정부 등 세계 어디서나 마약과의 전쟁은 대중에 대한 단속과 억압을 강화하려는 위선적인 수단이다.

윤석열의 마약과의 전쟁에 기대하거나 지지를 보내선 안 될 것이다.

속죄양 삼기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아인 씨를 속죄양 삼고 있다. 경찰이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처음 공표한 날은 국민의 힘 의원 궐상도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건에 관해 법원이 뇌물죄 무죄 판결을 내린 날이다.

연예인들이 마약류를 더 사용한다는 통계는 없다. 그런데도 마약류 수사에서 연예인이 자주 표적이 된다. 인기 스타를 ‘도덕적 타락’ 운운하며 한순간에 범죄자로 추락시키는 충격 효과, 도덕적 공포 조장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사회의 본질적 모순에서 지엽말단으로 돌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권위와 정당성도 키울 수 있다.

한국에서 한번에 가수와 배우를 가장 많이 구속시킨 1975년 대마초 파동도 그랬다.

유신헌법은 1972년 10월 국회를 해산시키고 선포됐다. 이듬해 3월부터 경찰이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했고 대마초를 단속 대상에 지정했다(그 전까지 대마초 흡연은 거의 처벌받지 않았다). 독재에 반대하는 학생과 청년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들이 하나씩 금지곡이 됐다.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과 불만이 누적되자, 박정희는 1975년 4월 긴급조치 7호를 발동해 대학 내 군대를 상주시켰고, 곧이어 발동한 긴급조치 9호로 반정부 표현을 일제 금지시켰다. 박정희는 “국민총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대마 사범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금지곡 가수들을 포함한 대마초 검거 소동이 벌어졌다. 대마초 소지가 사형도 가능한 중범죄가 됐다.

진정한 문제

대마초는 건강에 별로 해롭지 않고 중독성도 약하며 오히려 몇몇 의료적 효능도 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비범죄화되거나 합법화됐다.

헤로인, 코카인, 필로폰, 펜타닐 같은 약물 남용은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약물 남용이 늘어나는 건 자본주의 때문이다. 소외와 불평등, 빈곤과 절망이 만연한 자본주의는 우울증, 불안, 수면장애(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도 증가시킨다. 이 때문에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생겨 난다.

그래서 약물 남용은 사회적 문제이고 개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문제다. 약물 남용을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합당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약물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위험하다.

사람들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데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회복할 수 있게 충분히 지원을 해야 한다.

마약과의 전쟁은 위안과 치료와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오히려 범죄자로 만들어 절망을 키우는 정책이다. 윤석열의 마약과의 전쟁은 평범한 사람들을 지키는커녕 더욱 욱될 것이다.

진짜 문제는 사람들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나락으로 끝없이 떨어뜨리는 자본주의 체제와 윤석열 정부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김현진

이라크 전쟁 개전 20년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수렁에 빠뜨린 전쟁

2003년 3월 20일 바그다드 현지 시각으로 오전 5시 34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다.

네오콘 등 미국의 지배자들은 이에 앞서 이라크 침공을 공언해 왔다. 미국 부시 정부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2001년 9·11 공격의 배후이며,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다.

사담 후세인 정권은 미군 침공 한 달 만에 무너졌다. 5월 1일, 부시는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에서 “승전” 선언을 했다. 하지만 신속한 승리를 호언장담했던 미국은 이라크 전쟁이라는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미군은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11년 12월에서야 이라크에서 완전히 철군한다.

이라크에서 미군은 5000명 가까이 죽고, 수만 명이 부상 당했다.

이라크 국가와 사회 기반 시설의 붕괴는 급진 이슬람주의 단체들 중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와 같이 반동적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결국 미국은 힘의 한계를 느끼고 철군해야 했다. 중동에서의 패권을 강화하려던 미국의 애초 의도와는 달리, 이라크와 인근 국가에서는 오히려 이란의 영향력이 커졌다.

세계 패권의 재확립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등극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권력은 일본, 독일뿐 아니라 새롭게 떠오른 중국 등 경쟁 국가들로부터 도전받고 있었다.

미국 지배자들은 여전히 압도적 우위인 군사력을 이용해 세계 패권을 공고히 하려 했다.

1990년대 동안 아버지 부시 정부와



2004년 이라크 도시 팔루자의 미군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이라크 점령과 자국의 패권 재확립이었다

클린턴 정부는 군사력을 사용해 세계 곳곳에 개입했다. 1991년의 걸프전쟁, 유고슬라비아 내전, 소말리아 등에서 미국은 군사력을 과시했다.

2001년 아들 부시 정부는 이런 경향을 더 강화했다.

부시 행정부에는 부통령 딕 체니, 국방장관 도널드 럼즈펠드, 폴 울포위츠와 같은 네오콘 인사들로 가득했다. 네오콘이 지지한 ‘미국의 새로운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는 미국의 군사력을 적극 사용해 세계 패권을 재확립하는 게 목표였다.

이라크 전쟁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시작된 전쟁이다. 네오콘에게 2001년 9·11 공격과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은 절호의 기회였다. 이들은 이라크를 장악해 중동에서의 패권을 강화하려 했다. 중동에서의 패권 재확립

을 통해 중국·독일·일본 같은 경쟁자들이 중동 에너지 자원을 이용하는 과정을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전쟁에 맞선 저항이 전 세계를 뒤덮다

미국의 계획은 완전하게 실패로 돌아갔다. 사담 후세인 정권은 한 달 만에 무너졌지만, 이라크의 무장 저항 세력은 점령 기간 내내 미군과 영국군을 괴롭히며 수렁에 빠트렸다.

국방장관 럼즈펠드는 소규모 첨단 군대를 이용해 ‘전환적 전투’를 벌여 신속하게 이라크를 장악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미군은 점령 초기부터 현지의 저항 운동에 직면했고, 2004년에 저항 운동의 중심 도시였던 팔루자를 완전히 파괴하고 2000명을 학살하

고서야 이 저항을 꺾을 수 있었다.

국제적으로는 거대한 반전운동이 벌어졌다. 이미 이라크 전쟁 발발 전부터 전 세계 반전 여론은 고조되고 있었다. 이 운동에서 혁명적 좌파가 중요한 구실을 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2001년 9·11 공격 열흘 만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급진 좌파, 무슬림 단체들과 함께 ‘전쟁저지연합’이라는 공동전선을 결성해 반전운동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2002년에 세계 주요 도시들에서 수십만 명 규모의 반전 시위가 열리며 미국의 이라크 전쟁 시도에 대해 반대했다. 반전운동은 1999년 시애틀을 향장으로 폭발한 대안 세계화 운동(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여파와 만나 미국의 제국주의적 공세에 맞선 세계적 저항으로 발전했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orkersolidarity.org/join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
what-we-stand-for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 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다임코리아 현재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
동 946-1 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 노동자 연대 📍 @wspaper
📍 wspaper.org 📍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wspaper.org/online



아침에 읽는 <노동자연대>
구독하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이라크 전쟁 연표

- 2003년 2월 15일 국제적 반전 시위에 1000만 명이 참여
- 2003년 3월 20일 미국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며 침공 개시
- 2003년 4월 한국군 이라크 파병 동의안 국회 통과(실제 파병은 2004년 2월)
- 2003년 5월 1일 부시 승전 선포, 이라크 점령 시작
- 2004년 미군과 영국군, 점령 반대 운동의 거점인 팔루자를 공격해 2000명을 학살
- 2006년 시아파 출신 누리 알 말라키가 초대 총리로 이라크 정부 수립
- 2007년 미군 대규모 추가 파병
- 2011년 12월 미군 철수 완료



사진 출처: Jess Hurd

2003년 2월 15일 런던의 반전 시위대 이 날 전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거리로 나와 전쟁에 반대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직전인 2003년 2월 15일,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참여한 시위가 벌어졌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300만 명, 스페인 마드리드와 영국 런던에서 100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쏟아져 나왔다.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반전 시위가 처음으로 열려, 한국에서도 반전운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안타깝게도, 국제적 반전운동은 이라크 전쟁을 막거나 중단시키지 못했다. 미군의 이라크 점령 후에는 반전운동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점령 후에도 계속된 국제 반전운동은 미국의 위선과 잔혹 행위들을 폭로했고, 세계적으로 높은 반전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미국에게 심각한 정치적·도덕적 타격을 줬다.

이라크 전쟁의 유산

부시는 테러의 온상을 제거하고, 이라크에서 민주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라크 점령의 실상은 학살, 파괴, 만행으로 점철돼 있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중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하고 위험한 지역으로 전락해 버렸다.

특히, 미국의 침공은 이미 십수년 넘은 서방의 제재로 고통받아 온 이라크인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폭격으로 수많은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돼, 다수의 이라크인들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는 물론 기본적인 전기와 식수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다. 민간인에 대한 오인 사살과 폭격, 인권 침해도 다반사였다. 미군의 점령으로 사망한 이라크인의 수는 100만 명에 달한다.

위키리크스 웹사이트는 미군의 학살과 만행, 점령군이 부추긴 격렬한 종파 간 갈등을 기록한 육군 보고서 무려 40만 건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껌질을 벗긴 전선과 배터리, 호스가 자주 언급된다. 죄수들은 구타, 성적 학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불과 화약 물질에 피부가 타고, 고통스러운 자세를 취하도록 강요받았다.

이 보고서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 목적이 “압제자로부터의 해방”이나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국의 패권 강화였음을 잘 보여 준다.

미국은 사담 후세인 정권하에서 차별받았던 시아파를 후원하며 수니파와의 종파 갈등을 부추켜, 이를 점령에 이용했다. 그렇게 부추겨진 종파 갈등은 빈곤과 사회 인프라 파괴와 더불어 급

진 이슬람주의 조직 ISIS가 부상하는 배경이 됐다.

인기 없는 점령을 유지해야 했던 미국은 결국 2011년 이라크에서 완전히 철군하게 된다. 이로부터 10년 후인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완전히 철군했다. 미국은 세계 패권 재확립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는 커녕 상처투성이 모습으로 물러서야 했다.

20년 전의 반전운동이 폭로했듯, 결국 미국과 서방이 이라크를 침공하며 내세웠던 대의명분이란 것은 위선과 거짓일 뿐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안중에는 전쟁으로 파괴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박이량

▶ 16면에서 이어짐

터져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의 진정한 목적은 **노동시간 유연화**에 있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특정 시기에 압축적으로 장시간 일을 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또, 집중된 연장근로에 대한 비용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사용자들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일감이 적을 때 장차 휴가로 사용하라고 할 수 있게 된다.

독일 등의 사례를 보면,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계좌에 쌓아 둔

휴가(그에 따른 임금)도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이간질

정부는 이번에 노동시간 개악을 추진하면서 “근로자 대표”에 관한 법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사업장 안에서도 근무형태나 직무 특성별로 부분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근로자 대표에게 강제하는 규정을 두겠다고 한다. 가령 과반수 노동조합이 노동시간 유연화나 직무성

과급제 도입 등 개악에 반대하더라도, 특정 부문·사업부별로 결정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동자들을 서로 이간질해 각개 격파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시간 개악안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지배계급이 퍼는 공세이다. 임금은 늘지 않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절대적 잉여가치 증대의 방식이다. 임금에 해당하는 필요노동시간은 그대로인데 사용자들의 이윤의 원천인 잉여노동시간만 늘

어나게 만들어 착취율을 올리려는 것이다.

이는 생계비 위기 시기에 노동계급에게 더한층의 고통을 떠넘기는 것이다. 동시에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단결을 해치려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노동자들은 육체·정신 건강이 파편해지고 여가·정치 활동의 여유를 갖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에 맞서 싸워야 할 이유다.

김광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거짓말에 속지 말라

임금 억제하면서 장시간 몰아쳐 일 시키기

윤석열 정부가 3월 6일 노동시간 개악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문에 기반하고 있다 (본지 관련 기사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 참조).

고용노동부는 개악 프로세스도 함께 밝혔는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월이나 7월에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선택권 보장?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라 칭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개악안은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1주가 아니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장했다. 이렇게 되면, 특정 기간에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해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된다. 연장근로 수당을 가산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금을 억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개악안은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실시 요건을 완화하고,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산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개악안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노동이란 사용자의 전제(專制)에 기반한다. 노동자들



온라인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기절 시간표". 개악안대로면 주 5일 꼬박 새벽까지 일하고 주말에 기절

에게는 일할 장소, 시간, 작업방법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노동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를 겪는다고 지적했다.

개악안은 오히려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에 따르면이라도, 특정 주는 69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 그조차 1주 하루 휴일을 전제한 보수적 산정치일 뿐이고, 주휴일까지 근무하게 되면 노동시간은 더 늘어날 수

도 있다.

근로일 사이에 11시간의 휴식도 의무 규정이 아니다.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식도 보장받지 못한 채 1주일에 최대 64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하도록 개악하겠다고 한다. 64시간은 산업재해 관련 고시에 따른 과로사 인정 기준인데 말이다. 이미 (현행법상) 탄력근로제로 특정 주는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악안을 발표하면서 포괄임금제(장시간 근로와 수당 미지급의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의 오남용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립 서비스에 그치거나 조삼모사가 될 공산이 크다. 사실 개악안대로라면 사용자에게 포괄임금제 사용의 필요성을 줄여 줄 수 있다.

휴가 사용권 확대?

정부가 입법화하려는 근로시간저축 계좌제는 일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고, 이를 계좌에 적립해 뒀다가 일감이 줄 때 휴가로 대체·활용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휴가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는 명분을 댄다(휴가 사용권 확대).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휴가란 노동의 피로에서 회복하고 사회·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취지라면, (임금 등 근로조건 후퇴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연차휴가 등 유급휴가를 확대해야 마땅하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하거나 낮은 임금을 벌충하려고 노동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지금도 많다. 심지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법규정 적용에서 제외된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부여되고 있다.

"연차휴가도 못 쓰고 있는데 (장기) 저축휴가를 쓸 수나 있겠냐!"는 불만이

▶ 15면으로 이어짐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18일 대만 문제 - 기원, 변천, 현재의 위기
19일 핵무기와 한반도 - 문석영의 핵무기, 핵, 주병국
17일 마약과의 전쟁 성공할 수 있을까?
18일 우크라이나 전쟁 1년 - 확전으로 7-8월 평화를 위한 대안?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토론회 LIVE

인공지능 AI가 인간을 대신할까?

3월 15일(수) 오후 8시

발제 최무영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여러분의 질문을 보내 주세요 question.to.ws.tv@gmail.com

문의 ☎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유튜브 실시간 방송 노동자연대TV 검색